

월간

나라재정

창간호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1 / Jan.2017

01

축사

유일호 부총리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재정논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2017 예산방향

칼럼

국민이 바라본 나라재정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현안분석

해외 재정준칙 도입 현황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 START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04**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유일호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 05**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06** **격려사** Encouragement Address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 08** **권두언** Opening Address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 12** **재정논단** Opinion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 **2017 예산방향** Budget direction
2017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일자리 창출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민생안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경제활력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40** **칼럼** Column
국민이 바라본 나라재정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 44** **현안분석** Analysis
해외 재정준칙 도입 현황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 52** **동향과 소식** Trends / News
국내·외 재정동향
행사안내
- 57**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부총리 축하

Congratulatory
Address



유일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국내외 재정 동향과 관련 전문가들의 현안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나라재정」의 창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성장,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재정」이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 추세 속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여건도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박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경제·사회 구조의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재정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 경기 위축 우려에 대응하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노력도 함께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재정건전화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재정」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주기를 바라며, 특히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국민 한분 한분의 세금으로부터 모인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재정의 쓰임새를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재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부가 바람직한 재정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정보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와 함께 창간한 「나라재정」이 칠혹 같은 밤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품고, 어려운 우리 경제를 환하게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재위원장 축하

Congratulatory
Address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의원입니다. 먼저, 월간 「나라재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7월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으로 민간에 위탁되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관리가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관리까지 국가 재정운영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국가재정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엄격한 운영과 관리는 국가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 증대, 내수부진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경제전망도 불확실한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예산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40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먼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에 일익을 담당 할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원장님 이하 구성원 모두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깨끗한 운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월간 「나라재정」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17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격려사

Encouragement

Address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직 생활 30여년간 수많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가끔씩 한 손으로 박수치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재정개혁이나 재정건전성을 강조할 때가 그랬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우군(友軍)’을 찾기 어려웠고, 정책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미미했습니다. 선거 때면 더 심해집니다. 모두 돈 쓸 궁리를 하는 동안, 재정당국은 그 뒷감당을 위해 돈 만들 궁리를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재정 걱정을 내비치면 “재정의 시대적 소명을 모르는 세력”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재정개혁에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집 살림살이 꾸리듯이 수입에 맞춰 씹쓸이를 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 주인의식’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균형감각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컸습니다. 사실 “세금 더 걷어(혹은 빚을 더 내어) 복지와 경기회복에 쓰자”거나, “쓸 돈 없으니 지출 줄이자”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부라면 그런 단순한 처방을 넘어, 국민 부담은 가급적 적게 늘리면서도 복지를 확대하고 경기에 대응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선순환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실력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까지는 제법 잘 버텼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만큼 “쓸 때 썼으면서도”, OECD가 선정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에도 꼽혔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재정개혁 덕분입니다. 멀리는 10여년 전의 Top-down 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 예산제도, 디브리잉시스템 등의 재정혁신이 그렇고, 가깝게는 최근 1년여 사이에 재정당국이 추진한 장기재정전망이나 국고보조금 통합망 구축, 재정건전화법 국회 제출 등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재정 여건을 보면 이젠 정말 정부 혼자서는 힘에 부칩니다. 국가부채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을 둔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하면, ‘비탈길을 내려가는 눈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어도 점점 커집니다. 늘어나는 지출 수요는 이 눈덩이가 더 빨리 구르도록 가속도까지 붙은 모양새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놓치게 되면 우리 재정에도 금방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위기는 재정으로 수습할

수 있지만, 재정위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부릴 시간이 없고, 그나마 주어진 시간도 우리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재정당국의 마음이 바쁜 차에 재정 전문 월간지 『나라재정』 창간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로 무너지는 선진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이제 “언제 선진국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하고, 그 핵심은 ‘재정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재정이 탄탄한 나라 만들기는 ‘재정 주인의식 제고’와 ‘재정 균형감각 찾기’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나라재정에 대해 “어렵고 나랑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일자리, 교육, 안전 등 나랏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재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정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새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국민에게 일자리·복지로 돌려드리고, 써야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돈을 푼만큼 성장과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정책 조합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월간 『나라재정』이 재정의 이런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재정이 탄탄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정교한 내비게이션 역할도 기대합니다. 우리 재정의 현재 좌표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재정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해야할 일 등을 도출하고, 이를 여·야, 민·관, 중앙·지방이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재정에 대한 일치된 상황인식을 동력 삼아 ‘재정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하고, 월간 『나라재정』의 꼼꼼하고 깐깐한 독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1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 언 석**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나라재정」 창간에 부쳐

재정은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몇해전 재경회·예우회가 공동으로 펴낸 『한국의 재정 60년』을 보면, 해방 후 우리나라는 재정의 절반을 ‘대충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대충자금(對充資金·Counterpart Fund)은 정부가 미국·UN의 원조 물품을 팔아서 마련한 돈입니다. 나라만 독립했지 재정은 홀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에는 한해에 7번이나 추경을 편성해 전비를 냈고, 이를 갚느라 ‘전란수습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내외 자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정책이 경제개발을 이끌었고, IMF 외환위기도 재정을 지렛대 삼아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디딤돌이었고, 경제 위기의 방파제였습니다.

다시 재정이 화두입니다. 우리경제는 브렉시트(Brexit), 트럼프즘(Trumpism),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매우 커졌고, 대내적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니 “재정투입으로 다시 성장판을 열자”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쪽은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 재정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너무 빠른 부채 증가 속도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확대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찔끔’이고 나라빚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더구나 일본의 사례에서 봤듯이, 재정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재정건전성은 한번 고삐를 놓치면 순식간에 망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을 둘러싼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재정이 나라의 흥망과 부침을 결정한 역사적 사례는 매우 많고, 재정환경의 추세적 변화에 대응해 재정운용의 새틀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됩니다.

국내 유일 ‘재정 전문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담론에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월간지 『나라재정』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 즉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국유재산 관리 등 재정활동의 모든 과

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제 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에 축적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품질 통계를 만들어 재정당국의 정책운용을 뒷받침하고, 월간『나라재정』을 통해 재정정책의 갈길과 할 일에 대한 등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나라재정』에서는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출하는 재정 현안을 다룰 것입니다.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할 것이고, 정부에는 재정을 둘러싼 여론 흐름을 읽는 열린 광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예산 및 재정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용한 사업을 찾는 친절한 정보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나라재정의 현재 좌표를 반듯하게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월간『나라재정』을 우리 재정정책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2017년 1월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이원식

재정논단 Opinion



재정논단은 전문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위한 공간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hchoe@pusan.ac.kr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 등
대안 마련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덕분에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기에 대응하여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소간의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 및 양극화의 심화는 재정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2%대의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재정수입 측면에서 각각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구조조정, 국민(조세)부담률 인상 등 적극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은 민간의 세 부담 확충에 대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재정총량을 늘리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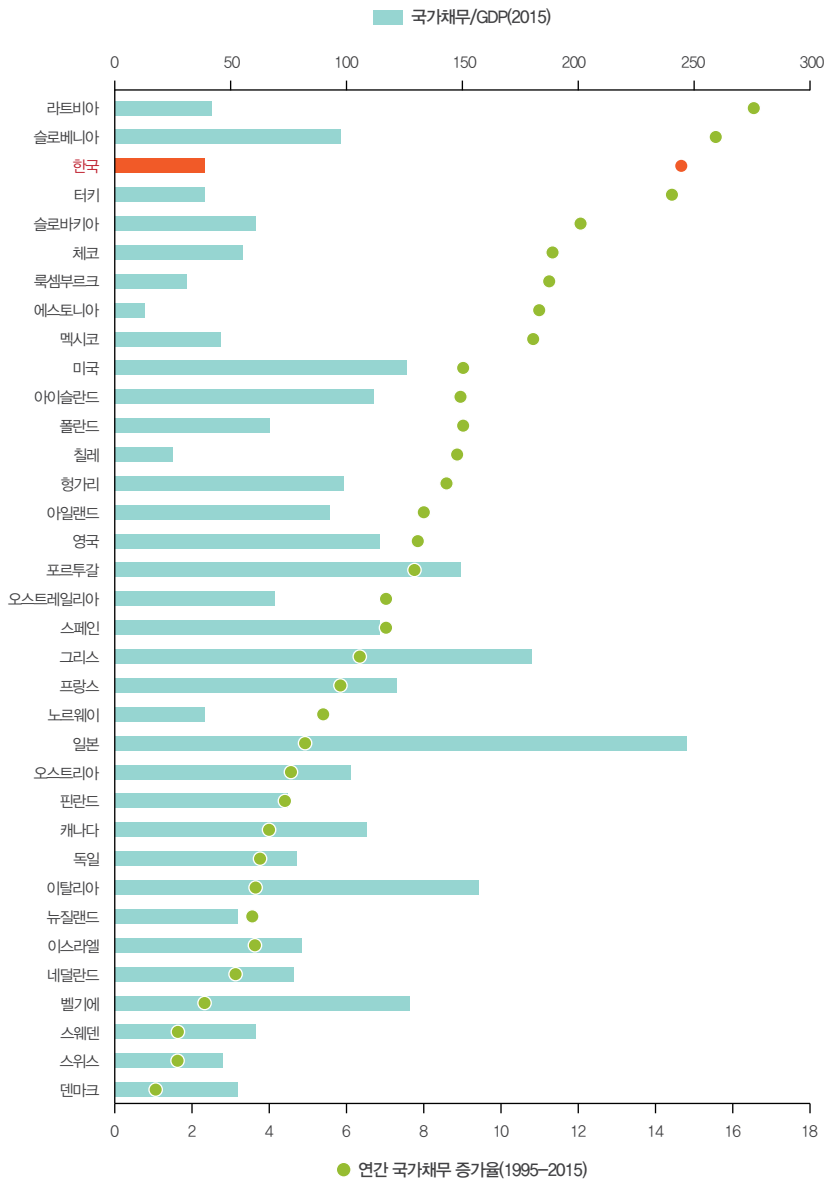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음을 확인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장기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

무 비율은 37.9%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낮다. 하지만 1995~201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빠른 연평균 15.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1〉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2015)과 국가채무 증가율(1995-2015)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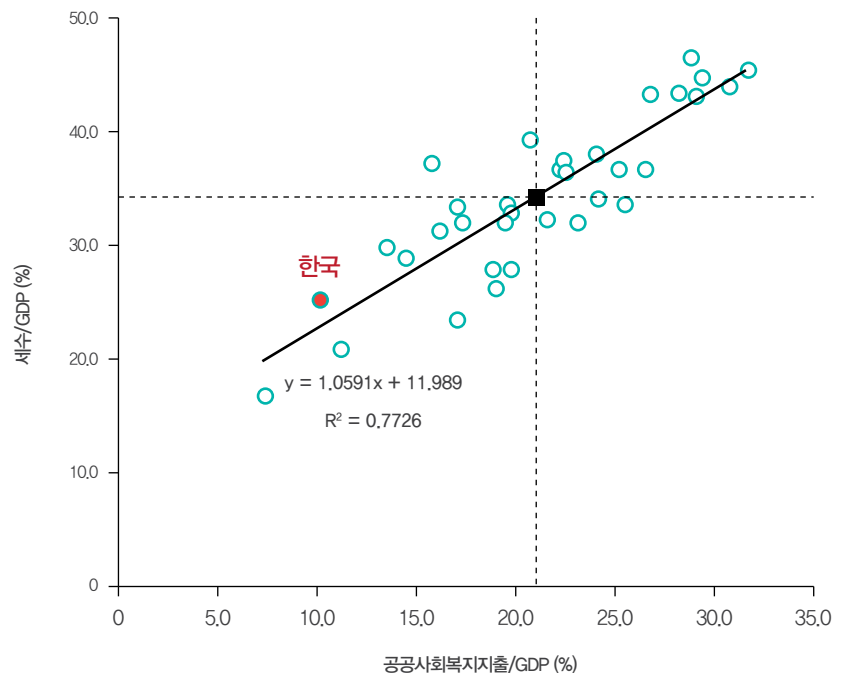
주: 국가채무 비율은 캐나다, 에스토니아, 일본, 멕시코는 2014년 자료이며, 아일랜드는 2013년 자료임.
자료: IMF; OECD.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통해 검토해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한국은 국민부담률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두 변수 간에는 상당히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 높아짐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1.1%가 증가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국민부담률의 인상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국민부담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재정건전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장기재정전망(2016~2060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기준선 전망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39.3%에서 2025년에 50%를 넘기 시작하며, 그 이후 2040년 80.1%, 2050년 111.0% 등을 지나서 2060년에는 15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현재 수준의 국민부담률이 유지된다면 국가채무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현수준의 국민부담률이
유지된다면
국가채무의 증가가
가속화

<그림 2>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2015년)



주: 국민부담률 자료는 멕시코는 2011년, 일본은 2013년, 터키는 2014년 자료임.
자료: OECD.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2000년대 말 이후 우리 재정은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부문을 포함한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다소간 애로를 겪어왔다. <표 1>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에 놓였던 2009년 이후 주요 재정변수의 추이를 보면, 총 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국세감면률 또한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축소하고 조세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있었지만 국가채무의 증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표 1> 재량지출, 국세감면 및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량지출 /총지출	59	55.6	54.2	53.5	54.5	53.1	54.9	53.3
국세감면률 (감면액)	16.7 (31.1)	15.4 (30.0)	14.4 (29.6)	14.1 (33.4)	14.4 (33.8)	14.3 (34.3)	14.1 (35.9)	13.6 ¹⁾ (36.5)
국가채무 비율 (채무액)	31.2 (359.6)	31.0 (392.2)	31.6 (420.5)	32.3 (443.1)	34.3 (489.8)	35.9 (533.2)	37.9 (591.5)	39.3 (638.1)

주: 1) 정부(기획재정부)의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의
의무지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추세로 볼 때, 새로운 복지정책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부문의 의무지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인데, IMF(2009)는 G20 국가의 고령화비용을 추계하면서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향후 필요한 고령화 관련 비용의 2.9%에 불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저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증가가 제약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발생 가능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정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개혁과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재량적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면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탓에 이어지는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한 측면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단기적으로 경기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통화정책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15년 말 현재 GDP 대비 85%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문제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 확충을 통하여 민간수요 증대와 기업투자의 확충을 효과적으로 유발하기는 힘들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확장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정책에서는 거시적 측면보다는 배분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미시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기부양이나 경제성장률을 제고한다는 목표보다는 자원배분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 등 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단기적으로 고용도 늘일 수 있는 부문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려는 유혹이 있겠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재정건전성은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축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어야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유지될 수 있다.

국민부담 증대 논의의 필요성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건축적인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국민부담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시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증세와 재정건전성 훼손 간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쪽에서는 장기재정전망 등을 통해 부담 증대의 시점과 규모 등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만, 일반재정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들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세목을 증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원칙에 부합하며,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세는 물론 재정개혁과 재정정책 방향의 설정 등 조세와 재정 관련 문제들은 예외 없이 경제에 관한 이념과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지극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약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이 제시되더라도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권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제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재정측면의
국민부담수준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2017 예산방향

Budget direction



2017년 새해 예산의

주요 방향을 해설합니다



01. 2017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02. 일자리 창출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03. 민생안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04. 경제활력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kyc9298@korea.kr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2017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

2017년 예산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해 일자리와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I. 2017년 예산의 전체 모습

총수입은 2016년보다 5.9% 증가한 414.3조원이며,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5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2016~2020년 중기계획 기간내 국가채무가 발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높게 편성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1.7%, 국가채무는 GDP대비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재정이 할 일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지지출 등 향후 재정소요는 더욱 커질 상황임을 감안시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총 지출의 약 32% 수준인 130조원을 배분하였고,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7.9% 증가하여 12대 분야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반면 SOC 분야 등 경제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II. 2017년 예산 중점 투자방향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조기재취업수당을 폐지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면서도 일자리 분야 지출을 전년 대비 7.9% 수준으로 대폭 증액시켰다. 특히,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부터 성장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0% 수준 확대하였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3.2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을 2016년보다 500개 이상 확대하고 농수산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보건의로 산업은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 등 융복합 연구 강화를 지원한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2017년에 12개 경기장 및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공할 예정이고,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 사물인터넷 시현단지를 신규로 구축하여 평창올림픽 사전 붐을 지원한다.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확대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1,778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지원 서비스,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내년에 준공 또는 조기 개통 가능한 사업에 대한 완공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인 13.3%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1조원 중 73%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을 제고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격 실시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여 결혼 적령기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산모도우미 이용가능기간 확장,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양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주거급여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치안·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을 지원하고,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및 GP·GOP 등 경계시설을 보강한다. 병사 봉급 인상 및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캠프형 인성함양 교육 및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등 병영문화 혁신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치안강화와 재난현장 대응지원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 확대를 통해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여 문지마 범죄도 사전에 예방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만큼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관리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해경함정을 총 45척 도입하고 119특수구조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석면 등 환경 위해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생활 여건 개선에도 노력한다.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

맺음말

국민의 혈세를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낭비요인 제거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하였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이미 2015~2016년간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인 600개를 초과달성하였고, 20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5개 사업을 추가로 통폐합하였다.

2017년 우리 경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회복세가 더디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내재되어 있는 등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는 형국이다. 치열한 고민과 많은 노력으로 완성된 2017년 예산이 하루빨리 각각의 주인을 찾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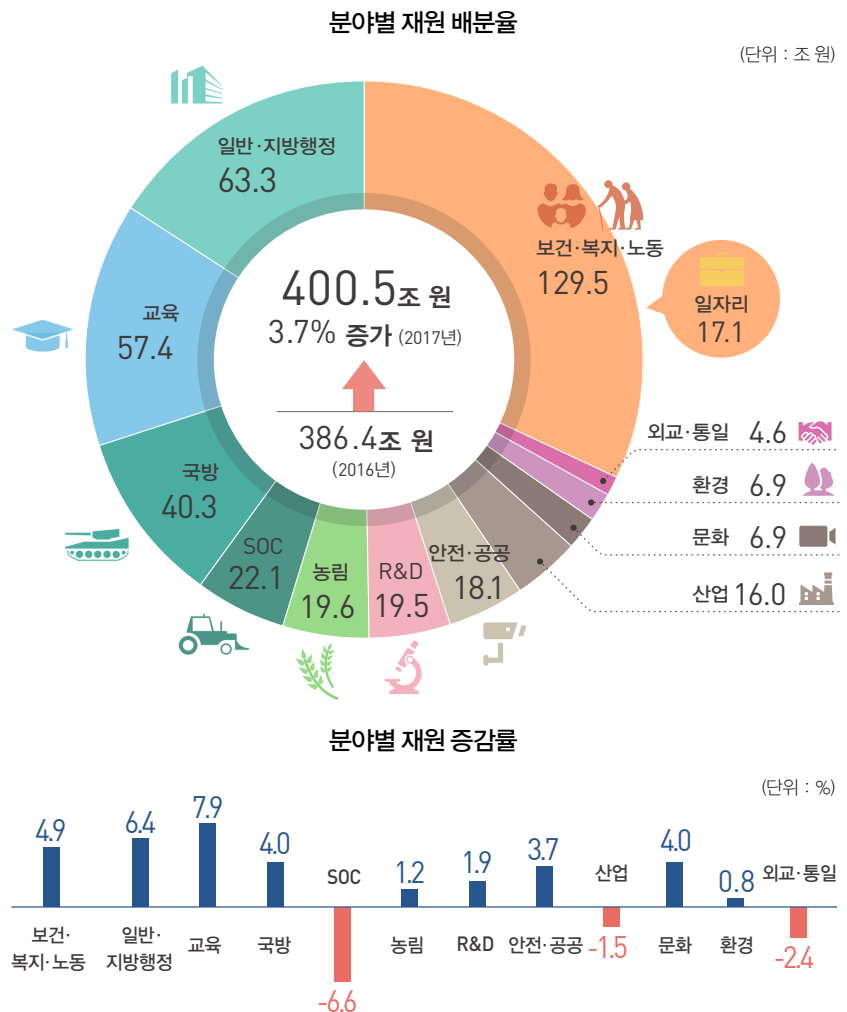
ilwhan@korea.kr

일자리 창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난 연말에 400조 5천억에 달하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2005년 200조원을 돌파한 이래 12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2017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최근 경기상황과 경제 사회구조에 따른 다양한 인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분야별 자원배분 및 증감률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17년
일자리 예산은
17.1조원



2017년 예산은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다. 특히, 최근 청년 실업률 등이 빠르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직업훈련, 창업,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

일자리 투자 확대 및 효율화

2017년 일자리 예산은 17.1조원으로 지난해 15.8조원 대비 약 1.2조원이 증가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7.9%로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토대로 성과미흡 사업은 폐지 또는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0.4조원)은 취업을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지원대상을 기존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한다. 특히, 정규직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아왔던 사업주 인턴지원금(3

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은 과감히 폐지하고, 근로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16개 사업을 6개로 통합하고, 각 사업별로 상이했던 인건비(중소 60, 대기업 30만원) 및 간접노무비(중소 20, 대기업 10만원) 등의 지원단가를 일원화하여 정책 수요자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창업지원 역시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기존 33개에서 20개로 통합하고, 부처간 유사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통폐합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예산은 2.6조원으로 전년(2.3조원) 대비 10.4% 증가한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한다. 게임산업(451억원 → 64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원 → 2,626억원), 첨단 융복합 콘텐츠(275 → 275억원)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VR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로 111억원 재정지원하는 등 문화, 바이오, 융복합 등 新산업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 문화, 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2,372억원에서 2017년 2,578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경찰, 소방 등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비비로 5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반영한다.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500팀, 500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선도대학 지정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53억원에서 2017년 92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신규로 120억원 지원하고, 청년들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지원을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성공패키지 및
대학창업펀드를 조성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약 2,000억원 확대(1조 4,500억원 → 2017년 1조 6,500억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학단계부터 일경험 등 취업 준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교외근로 장학금(시간당 9,500원) 지원대상을 기존 3.3만명에서 3.7만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내 취업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기존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과정 내 소그룹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를 새롭게 신설(968억원)하고,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10개 과정, 200명)와 신성장·융복합분야(3개 과정, 90억원) 고숙련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수를 기존 6,300개에서 2017년 10,000개로 확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기존 60개교에서 200개교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사업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취업상담-훈련-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대상을 기존 13만명에서 2017년 16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내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 센터를 6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 센터내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신규사업(센터별 1억원)을 마련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취업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매월 일정액을 정부, 기업, 개인이 가상 계좌에 납부하여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개인 300만원)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취업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2,6조 원
전년대비 10.4% 증가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500개 팀, 500억 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게임 642억 원 / VR 111억 원


일학습병행제 기업
6,300 → 10,000개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청년 이외에도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여성들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최소화, 일·가정 양립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들도 휴직기간 중 인력부족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추가로 5개소를 확충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손쉬운 재취업·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복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천명에서 3천 5백명으로 약 2배 확대한다. 또한, 유연·재택근무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새롭게 지원(보조 2,000만원, 융자 4,000만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신설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 확대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는 장애인공단을 통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8천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월3.5만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근로 특성을 감안하여 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2017년 1,500개)하여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장애인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맞춤형훈련센터를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기존 16~27만원씩 지급되던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31.6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기존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기존 6천점에서 7천점으로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기대수명 증가, 근로연령 확대 등을 감안하여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노인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 추가 5만개 확대하고, 2004년 이후 20만원 수준에 머물던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2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9천명에서 1만 1천명으로 확대하고 장년인턴 채용 또한 기존 1만 5천명에서 2만 7천명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을 기존 기간제, 파견, 안전보건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임금상승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한, 차별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을 기존 1,924개소에서 2,533개소로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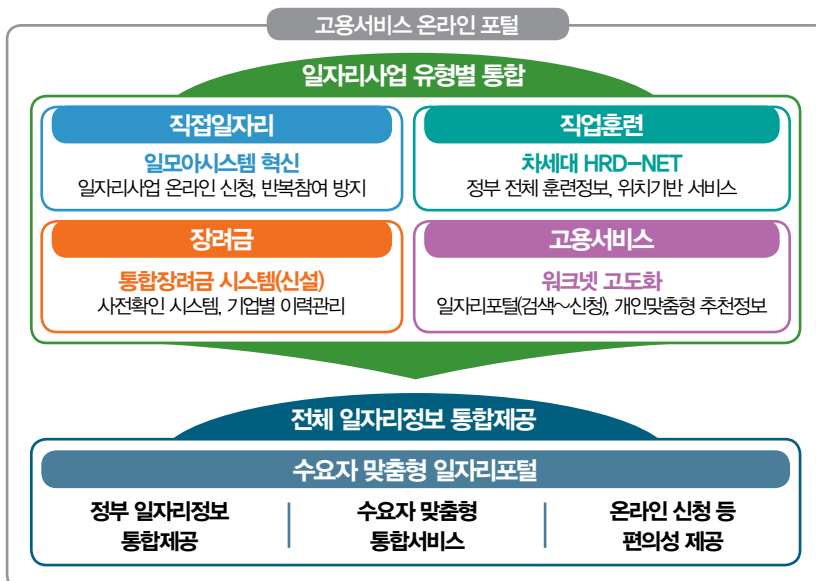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고용서비스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우선, 고용복지+ 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기존 70개에서 100개로 30개 확대하고, 고용센터가 취업지원 종합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함께 전체 고용센터에 일자리 발굴 전담팀을 배치한다.

또한, 현재 부처별·사업유형별로 산재된 일자리 관련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한다. 1단계로 일자리 사업 유형별 관리시스템(직접일자리(일모아시스템), 직업훈련(HRD-Net), 고용서비스(워크넷))에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모두 통합관리하고, 2단계로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을 201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 포털에서는 사용자 특성 및 서비스 이용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자 접근성
제고 차원
원스톱 고용서비스
확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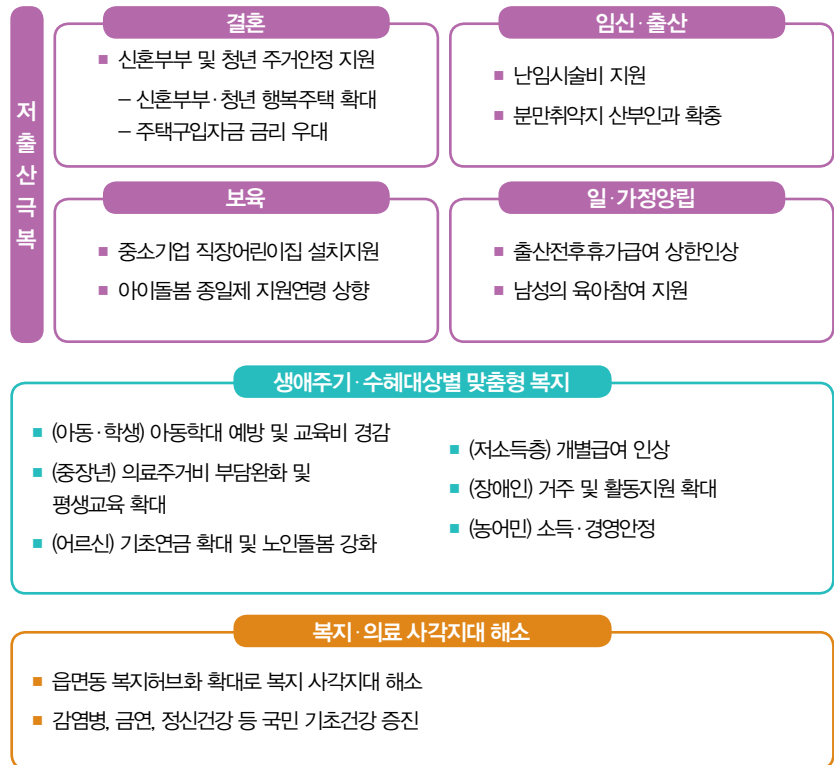
ahndogeol@korea.kr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

민생안정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극복 지원

저출산은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단계별로,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지원 확대

첫번째로, 결혼 단계에서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8만호에서 4.8만호로

확대하고 약 2천호의 매입임대아파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두번째로,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부부와 산모,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시키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한다. 분만 취약지에 있는 산부인과를 14개소에서 16개소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자녀 가구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가능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확대한다.

세번째로, 보육 단계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원한도를 단독의 경우 3억에서 4억으로, 공동의 경우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비율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맞춤형 보육 정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을 확충한다. 지역사회 이웃 간 돌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현 52개에서 66개 지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향후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는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네번째로, 일가정양립 단계에서는 맞벌이가구 시간지원을 확대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현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로 상향한다. 또한 '아빠의 달' 지원 인원을 현 1,8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하고, 두번째 자녀부터 급여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안정 지원,
난임부부 지원,
맞벌이 가구
시간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 전 계층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단독 3 → 4억 원 / 공동 6 → 8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월 10 → 12만 원



'아빠의 달' 지원
첫째아 150, 둘째아 200만 원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첫째, 아동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학생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약 30억원 규모로 '위기 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현 58개에서 65개소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또한 증가시킨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3.9조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금을 현 2,719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 완화와 평생 교육을 확대한다.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현 2.5만호에서 4.6만호로 확대한다. K-MOOC(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의 저변을 넓히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셋째, 어르신의 자립기반 및 안전망을 확충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현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실버주택을 1천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노후 불안 해소 및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을 2016년 기준 7.9조원에서 8.1조원으로 확대하여 노인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노인층의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2016년 기준 3,907억원에서 4,664억원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2016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넷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별급여를 인상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현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인상하고,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를 2.5% 인상한다. 희망키움통장의 신규 가입을 확대하여 현 2.5만가구에서 2.78만 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게하고,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원자를 현 11,000명에서 11,2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항목을 개선하여 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거주 및 활동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16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현 470개소에서 486개소로 확대 제공한다. 장애인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인원을 6.1만명에서 6.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시간당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한다.

생애주기(아동, 중장년, 어르신) 및 수혜대상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 지원 확대

여섯째,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3.5% 인상하며, 전몰 및 순직 유족 보상금도 5.5% 인상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증액한다.

일곱째, 농어민의 소득, 경영안전을 위해서 받고정 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 보전변동직불금을 확대하고 쌀재고량 축소를 위한 소비진작 및 농지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결과에 따라 받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여덟째, 불법어업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지속지원 및 불법어업 방지시설을 확대한다. 불법 조업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4척 신조 및 노후 지도선 5척 대체건조를 지속 지원한다. 신속한 단속정 출동을 위해 데비트(단속정을 한번에 해상으로 진수 할 수 있는 전용 승·하강 장치) 6대를 교체하고, 헬멧 등의 단속장비 투자를 확대하여 단속공무원의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지원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불법조업 방지 뿐 아니라 수산자원 증강 효과를 동시에 기대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 및 국민 기초건강 증진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첫째,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기존 70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한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금액을 2016년 28억원에서 124억원으로 확대한다.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항생제 통합감시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을 신규추가한다. 결핵안심국가를 위해서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1만명에서 7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효능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초건강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을 대폭 확충한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입원수가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여, 입원초기 치료여건을 개선한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월 127 → 134만 원


잠복 결핵 검진
1 → 77만 명


행정복지센터
700 → 2,100개소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296억 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ksb624@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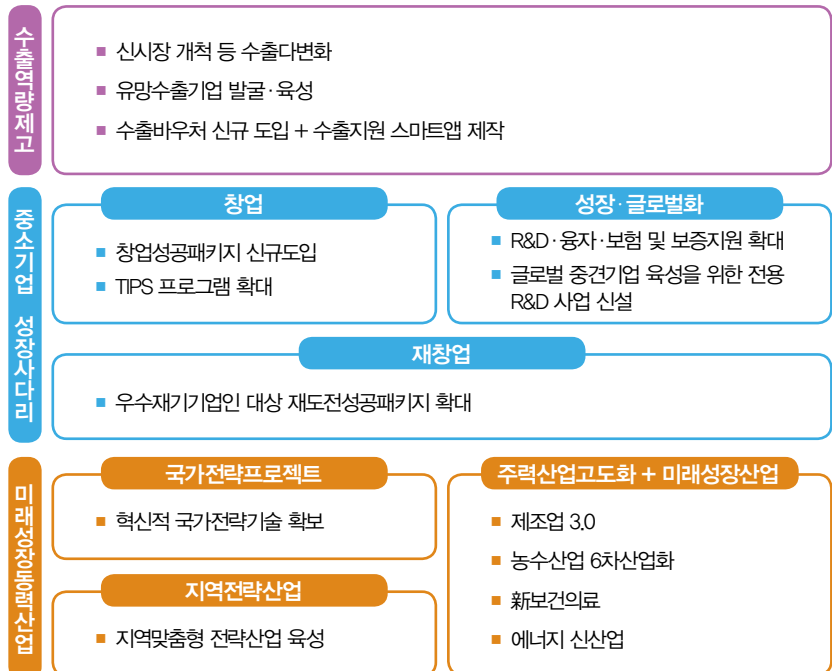
수출 역량 제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

경제활력 회복

2017년 경제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2017년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반만에 가장 낮은 0.4%(전기대비)에 그치는 등 회복세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美 트럼프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 英 브렉시트의 여파 등 선진국발 변동성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저성장의 고착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도 경제 분야 예산은 ① 수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 ② '창업 → 성장 → 글로벌화'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③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수출 역량 제고

수출은 2016년 4분기에 8분기만에 처음으로 증가세(1.9%)로 돌아서는 등 2년여 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진하던 수출이 개선되도록 2017년도 예산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수출체질 강화를 위해 수출 주체(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대상 시장(전략·신흥시장 중심 다변화), 수출 방식(전자 상거래 수출 확대) 측면의 구조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지원 바우처」방식의 도입(총 1,778억원)이다. 정부는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① 지원한도, ②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등 수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지원항목, ③ 공공기관, 관련 협회, 민간업체 등 다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명시된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기업의 서비스·공급자 선택권은 확대되는 한편,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해온 다수의 수출지원 기관 중 선택 받지 못한 기관은 도태되는 반면, 역량 있는 민간업체는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지도 확대한다. 첫째,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퇴직한 전문 무역인력이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46억원 → 91억원)한다. 신규 거래선 발굴 등 지원성과가 높아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152억원 → 360억원), 해외전시회(219억원 → 229억원) 사업 등도 규모를 확대한다. 둘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아세안,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120억원)하고,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중·미·일 3개국 수출 비중이 44%에 달하는 농식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84억원)한다. 정보조사, 마켓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新시장 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고, 해당 시장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출방식 다변화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수출 지원도 확대(53억원 → 99억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 99.9%, 고용의 88%, 부가가치 생산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활력 회복,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한
「수출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서는 유망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017년도 예산은 「창업 → 성장 → 중견·글로벌 기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핵심 지원 사업을 확충하여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핵심기술을 가진 유망 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56개 창업팀이 후속투자 1,674억원을 유치하는 등 그간 대표적인 기술창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예산을 560억원(180개사)에서 770억원(250개사)으로 확대한다. TIPS 사업은 민간운영사(성공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중 선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3년간 최대 9억원(R&D 5억원, 사업화 자금 1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 2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유망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전 단계(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자금 확보, R&D 등)를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신규 도입(500억원, 500개팀)한다.

사업 신설을 통해 성장기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우선, 중견기업 중 수출실적이 없는 순수 내수기업 비중이 53.9%(2014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R&D, 수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해외시장 맞춤형 제품 생산 R&D에 60억원(60개사)을, 현지시장 정착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100억원(100개사)을 지원한다. 특히, R&D 지원 사업은 기업이 R&D에 先투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정부가 일부 비용을 後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1억원, 기업이 9억원을 투자하고, R&D 성공시 정부가 4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5:5로 재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 R&D 기획 역량이 부족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R&D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도입(50억원, 100개사)한다. 정부 R&D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벤처 기업과 경험 많은 R&D 컨설팅 기관을 연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R&D 기획역량을 보조·교육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의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한 사업 계획을 가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재기를 위한 창업교육, 사무공간,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53억원(100개사)에서 100억원(189개사)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 과잉, 후발국 추격 등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적응도를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2017년 예산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전략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며,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9대 국가전략 R&D 프로젝트에 2017년 581억원을 투자한다. 9대 분야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성장동력사업·바이오 기후변화 전략·경제사회 이슈 중에서도 국가가 집중할 사업을 엄선한 것이다. 특히, 향후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5개 프로젝트(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3개 통과, 2개 조사 중)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2017년에는 국비 32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2017년 국비 260억원을 투자하고,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총 3.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가 1.7조원 투입(2017년 4,192억원)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도 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4개 시·도의 27개 지역전략 산업은 첨단 기계·소재 산업, 미래형 자동차·항공 산업, 생명·건강을 위한 웰빙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규제프리존특별법(약칭)이 2016년에 여야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를 고려하여 그동안 지원되어온 지역전략산업의 계속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법과 직접 연계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예비비(2,000억원)로 확보한 상태이다.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면 예비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ICT 스마트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업은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한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255 → 312억원)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신규 35억원), 스마트축사(200 → 269억원) 조성 등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한다. 新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융복합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신약 후보물질 연구 및 신약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임상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2,154 → 2,471억원)하고, 나노·줄기세포, BT·IT 융합 등 융·복합 연구도 강화(1,144 → 1,206억원)한다.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 출범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관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6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4,536 → 5,844억원)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칼럼

Column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바라보는 이야기와
국가재정에 대한 생각을 담아 꾸며지는
국민과 만나는 재정정책의 장입니다

국민이 바라본 나라재정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한국 재정을 둘러싼 딜레마

국민이 바라본 나라재정

“올해도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트리거(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이다. 재정은 과연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다음은 나라 재정이 직면한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두 장면이다. 한 장면은 새해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2%대 저성장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도 그 일환이다.

두번째 장면은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통해 2015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1,003조원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4%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증가 속도가 둔해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결과일 뿐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 없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일반정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향후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낼 복지와 관련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 등이 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나라가 부채의 함정에 한번 빠져들면 좀체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

상기 두 장면은 한국 재정을 둘러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중앙 일간지를 중심으로 살펴 본 언론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먼저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사실 제목들을 살펴보자.

‘민·관 협력으로 과도기 경제난국 헤쳐 나가야’, ‘적극적 경기부양 예고한 정부, 위기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경기부양 총력 다하라’,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2017년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하라’, ‘20조 재정 보장, 실효성 있는 경기 부양책 되어야’, ‘저성장 고착화’ 등 대부분 위기를 강조하면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점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국가채무 600조 돌파, 특단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눈덩이 국가채무 근본대책을 논의하자’, ‘국가채무 600조, 더 화급해진 페이그 준칙 법제화’, ‘국가채무 600조 시대 선거철 포퓰리즘 막아라’, ‘국가채무 급증, 법인세 인상으로 막을 수 없어’, ‘국가채무를 40%대, 재정·구조개혁 더 절실해졌다’, ‘양호한 재정건전성? 과신하면 안 된다’ 등 경고성 논조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제시하는 나라재정에 대한 주문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퍼주거나 나라 빚을 마구 늘리는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구조개혁도 함께 하면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당국이 보기에 이런 얘기는 당장의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공공부채 늘리기는 절대 안 된다는, 얼핏 모순된 주장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든지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지적들은 정부로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점이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난해한 고차 방정식, 경우에 따라서는 해(解)가 존재하는 않는 방정식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재정으로 안 되면 다른 정책수단과의 믹스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꼭 경제위기 국면이 아니어도 재정당국이라면 늘 고민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과제다.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해법을
찾아야

현안분석

Analysis



현안분석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자들이
재정과 관련한 현안을 연구·분석하여
정책방향성을 모색하는 전문 보고서로 구성됩니다

해외 재정준칙 도입 현황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jazzsh@kpfis.kr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oyoungp@kpfis.kr

해외 재정준칙 도입 현황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 시사점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소요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교적 재정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초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소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fiscal rule)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사회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도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유형 및 해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한국의 적용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준칙의 정의 및 유형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적자, 차입 등 주요 재정지표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에 대해 제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한도 및 목표로 표시된다(Kopit & Symansky, 1998). Schaechter 외(2012)는 “수치적 제약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Tapp(2010)은 “법제화된 재정목표이며, 재정목표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같은 예산 성과에 대하여 수치적 목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법적 토대, 총량적 재정 목표, 제재 조치 등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재정준칙은 헌법, 법률, 규제, 국제협약 등 법적인 토대에 기초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등과 같은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설정을 통해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설정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사법적·금전적·신용적 제재 등의 조치로 재정준칙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책설정의 왜곡된 동기를 바로잡아 재정건전성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더하여, 재정준칙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서로 상충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다. 자칫 이러한 경향이 경기 호황기에 과도한 지출로 이어져 경기 침체기 경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Tornell and Lane, 1999; Schaechter 외, 2012).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인 적자기조의 재정운용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각국은 각 경제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은 목표 및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정준칙은 엄격한 정도에 따라 경성 준칙(hard rules)과 연성 준칙(soft rules)으로 구분되며, 준칙의 제정과 집행 주체에 따라 국가적 준칙(national rules)과 초국가적 준칙(supernational rules)으로도 구분된다. 또한 회계기준에 따라 현금주의 혹은 발생주의 기준의 준칙으로도 구분되며, 목표변수를 총계(gross basis)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계(net basis)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리 구분될 수 있다.

다양한 분류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총체적 목표(target aggregate)에 따른 분류이다. 목표에 따른 분류방식은 크게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네 가지로 구분 한다.

- 채무준칙(Debt Rules)은 GDP대비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채무 수준에 대하여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약조건을 가하는 방법으로, 영국과 EU가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s)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지(기초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등)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구조적재정수지준칙이란 경기변동이 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비정상적이거나 일회성인 사건의 효과를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 지출 준칙(Expenditure Rules)은 정부지출 증가율, 감세규모 등 재정지출 규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수입준칙(Revenue Rules)은 재정수입에 대한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을 확대하거나 과도한 조세부담을 방지하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재정준칙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적자기조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효과적인 정책 수단**

〈표〉 재정 준칙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채무 준칙	•부채수준 유지와 직접적 연관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명확한 단기 운영지침 미제시 •경기안정화 기능 부족 •임시적 대안의 총족이 어려움 (순융자/순차입) •통제불능요인(임시조치 및 개발)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재정 수지 준칙	•명확한 운영지침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과 직접적 연관 •커뮤니케이션 및 감독 용이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기초재정수지는 통제불능 요인(대규모 경기침체)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구조적 재정 수지 준칙	•상대적으로 명확한 운영지침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임 •경기안정화 기능(경기대응적) •일회성(on-off)·임시요인 계정의 허용	•구조적 변화시 수정 복잡 •복잡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및 감독이 어려움 •일회성(on-off)·임시요인의 임의사용 제한필요
지출 준칙	•명확한 운영지침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과 직접적 연관 •정부규모 조정이 용이 •상대적으로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세입 측면의 제약이 없어 재정건전성 제고에는 도움이 안됨 •지출 한도를 맞추려다가 지출 분배에 불필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수입 준칙	•정부 규모의 조정이 용이 •세입정책 및 행정의 개선 •경기순행적 지출 방지 가능	•지출 측면의 제약이 없어 재정건전성 제고에는 도움이 안됨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자료: Schaechter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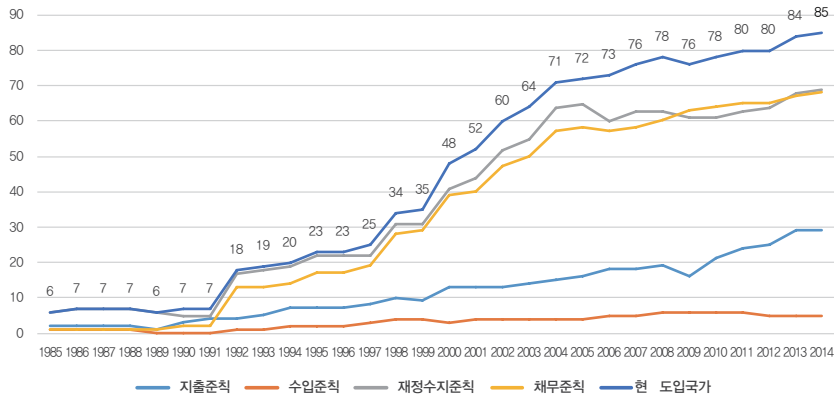
재정준칙의 운영현황

1970년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 오일쇼크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각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입 추세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을 기준으로 85개국에서 재정준칙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그림 1) 참고). 재정준칙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정수지준칙(BBR)과 채무준칙(DR)은 다른 준칙들에 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출준칙(ER)과 수입준칙(RR)을 채택하는 국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이
활발히 운영

〈그림 1〉 재정준칙의 현황

(단위 : 국가수 / 년도)



자료 : IMF(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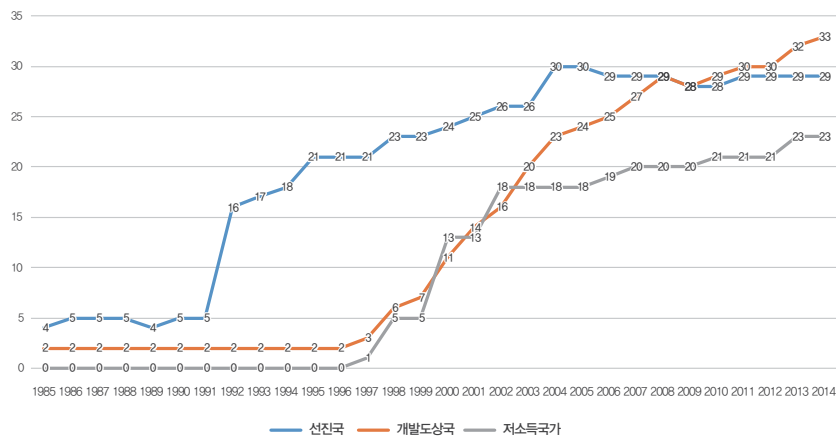
1990년대 초,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등 5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수준별 재정준칙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29개의 선진국, 33개의 개발도상국, 23개의 저소득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국가는 증가하는 추세

〈그림 2〉 경제수준별 재정준칙 추이(1985-2014)

(단위 : 국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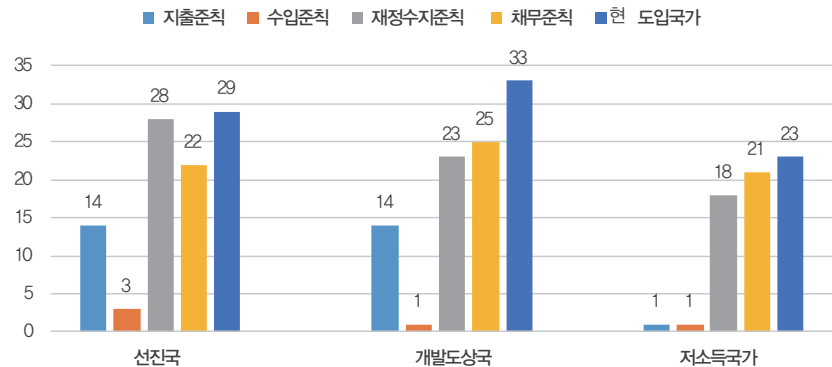


자료 : IMF(2015)

〈그림 3〉을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의 재정준칙 운영 양상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운영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수입준칙을 운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준칙의 활용이 채무준칙에 비해 높은 편이나,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는 채무준칙의 활용도가 재정수지준칙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경제수준별 재정준칙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국가 수)



자료 : IMF(2015)

경기안정화 기능
제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유연성 확보 필요

재정준칙의 범위와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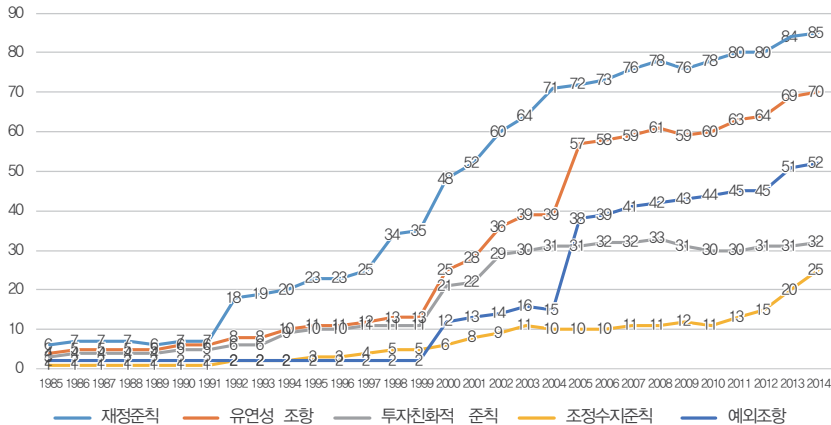
재정준칙은 재정당국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제약하는 단점이 있다. Bova 외(2014)는 재정준칙을 설계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Guerguil 외(2016)는 IMF보고서에서 재정준칙도입 시 적절한 예외조항, 경기변동을 고려한 경기 조정적 목표수치, 준칙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예외조항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는 재정준칙의 범위에서 공공자본지출(public capital spending)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사회이전지출(social transfers)이나 이자지출(interest payments)등 특정 유형의 지출을 제외하는 방식이 있다(Guerguil 외, 2016). 또한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준칙목표를 설정하는 경기조정수지준칙(cyclically adjusted rules)과 예외조항(escape clauses)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활용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국가들은 2014년 기준 70개 국가로(〈그림 4〉),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불가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혹은 재정준칙의 목표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완화하고 있다.

〈그림 4〉 유연한 재정준칙 운영 현황(1985~2014년)

(단위 : 국가 수)



자료 : IMF(2015)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량적 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부담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재정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초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첫째, 재정준칙의 목표 수정가능성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의 목표가 빈번하게 수정된다면, 재정준칙이 부채비율 및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재정준칙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 공공투자 친화적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재정준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및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참고문헌

- Bova, E., Carcena, N., and Guerguil, M. (2014). Fiscal rules and the procyclicality of fiscal policy in the developing world (IMF Working Paper 14/122).
- Guerguil, M., Mandon, P., and Tapsoba, René. (2016). Flexible fiscal rules and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MF Working Paper 16/8).
- Kopits, G., and Symansky, S. (1998).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98/162).
- Schaechter, A., Kinda, T., Budina, N., and Weber, A. (2012).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IMF Working Paper 12/187).
- Tapp, S. (2010). Canadian experiences with fiscal consolidations and fiscal rules.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 Tomell, A. and Lane, P. R. (1999). The voracity effec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22-46

동향과 소식

Trends / News



국내·외 재정관련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재정동향
행사 안내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국내·외 재정동향

● OECD, 우리나라 2017년 경제성장률 2.6%

• OECD는 2016 「Global Economy Outlook」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7년 3.3%, 2018년 3.6%로 발표

▶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7년 2.3%, 2018년 3.0%로 전망되며, 유로지역은 2017년 1.6%, 2018년 1.7%, 일본은 2017년 1.0%, 2018년 0.8%로 전망

▶ 한국은 2017년 2.6%, 그리고 2018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국가	2.9	3.3	3.6
미국	1.5	2.3	3.0
유로지역	1.7	1.6	1.7
일본	0.8	1.0	0.8
중국	6.7	6.4	6.1
한국	2.7	2.6	3.0

자료 : OECD, Global Economic Outlook 2016

•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와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이 아니라 지출 대비 세입 증대로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경향

• 다만 환율, 자본 유·출입 변동성 등은 향후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OECD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용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R&D분야의 경우 GDP대비 지출 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출규모는 일부 국가에서 감소되고 있으며, GDP 대비 교육과 공공투자에 대한 지출규모도 감소하는 경향

• 경제성장을 위하여 공공지출분야 중 정의 외부효과가 큰 교육 및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도록 권고

▶ 반대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주의 무역 기조는 탈피할 것을 권고

국내·외 재정동향

Global
Fiscal Trends



일부 국가에서 활용중인 전략적 검토(strategy review),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므로, 우리나라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출구조개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민부담률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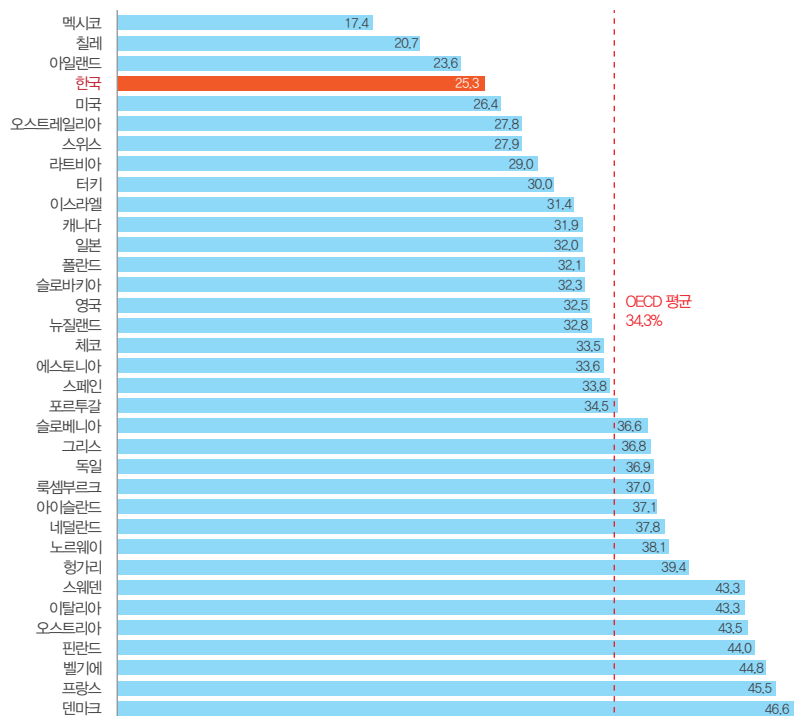
• OECD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2009년도 3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별로는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46.6%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 프랑스(45.5%), 벨기에(44.8%) 순

※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이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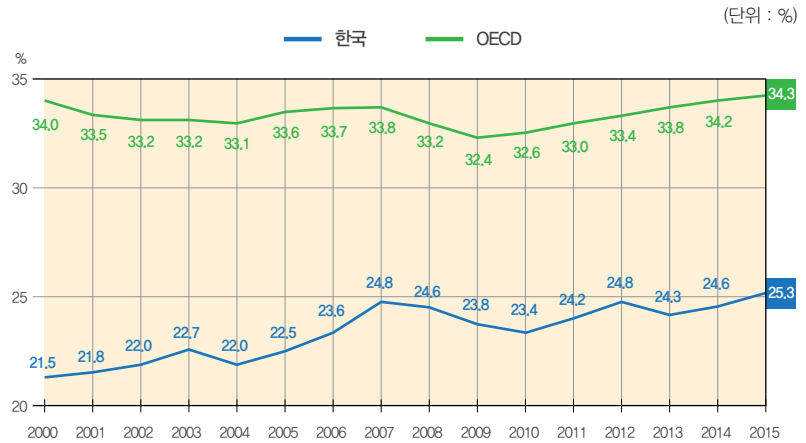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국내·외 재정동향

Global
Fiscal Trends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25.3%, FY2015 기준)은 OECD회원국 평균 국민 부담률(34.3%)보다 9%p 낮으며,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29번째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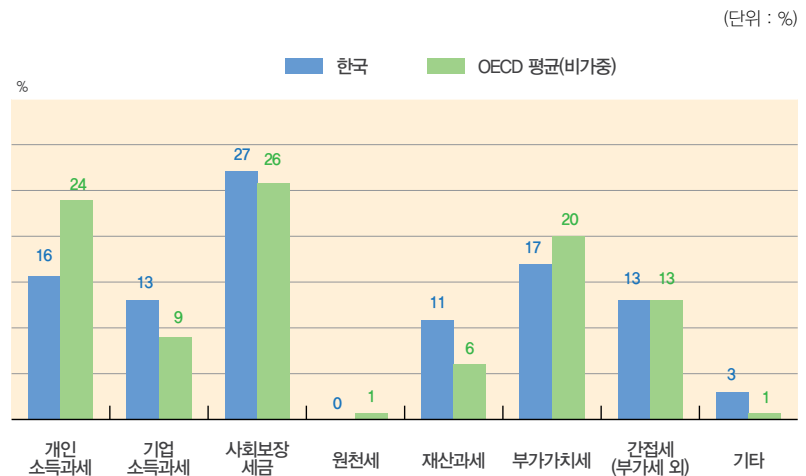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평균 OECD의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낮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국가별 조세구조 등 다양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치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움

〈조세구조 비교〉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국내·외 재정동향

Global
Fiscal Trends

● OECD, 재정여력 평가

• OECD는 2016 「Global Economic Outlook」에서 각국의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재평가

※ 재정여력은 크게 시장접근법(market access)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측정가능

• 시장접근법으로 재정여력을 측정한 결과, 2014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의 재정여력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전 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재정여력이 확대되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저성장 탈피 노력 요구

• 한국의 경우, 2017-2018년 기준으로 재정지출기조가 약간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소 확장적인(mild expansionary) 재정운동을 권고

▶ 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2%)를 하회하고 있어 추가적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시행은 가능하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17-18년 각국의 재정지출 계획 및 OECD 권고안 비교〉

		Recommended fiscal stance for 2017				
		Contractionary	Mildly contractionary	Broadly neutral	Mildly expansionary	Expansionary
Projected fiscal stance for 2017	Contractionary					
	Mildly contractionary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인도네시아, 한국	
	Broadly neutral			칠레, 체코, 덴마크, 스페인,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 스웨덴, 남아공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Mildly expansionary	헝가리		슬로베니아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Expansionary	아이슬란드			중국	룩셈부르크, 미국

OECD recommends more expansionary policy than planned

OECD recommends less expansionary policy than planned

자료 : OECD, Global Economic Outlook 2016

OECD에서는 한국이 확장적 재정운영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거시재정운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국내·외 재정동향

Global
Fiscal Trends

행사 안내

● 2017년 전미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개최

• 2017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카고에서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학술대회 개최

▶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금융학회(American Financial Association, AFA), 하버드대학교 등 56개의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와 공동개최

▶ 'Nobels on Where is the world Economy Headed?' 'Public Pension funds' 'Health Insurance' 등의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보건(Health)*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논의함

* Measuring Socio economic Health inequalities, New Perspectives on Economic of Obesity and Health 등

•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기술진보로 인한 경제적 위험요인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정치적 요인 등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글로벌 경제 이슈 등 논의

● 24th 공공부채관리 세계포럼 개최(예정)

• 국가부채관리와 관련하여 재정당국, 중앙은행, 민간분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이 2017년 2월 15~16일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임

• 우발부채 관리, 부채관리 전략,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국내 유일 재정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한국재정정보원이 2016년 7월1일 개원식을 갖고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정식 출범
- 디브레인(DBrain)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유재산 관리 등 우리나라 모든 재정 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이며, 2015년 기준으로 6만5천여 명의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연간 1억여건의 재정업무를 처리
- 그동안 민간기업들에 위탁해 운영하던 디브레인을 앞으로 재정정보원이 전문적으로 맡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절에 제기됐던 전문성, 안정성, 보안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 이날 개원식에는 유일호 부총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유관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세계적인 수준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축원





● '인하우스 싱크탱크' 연구본부 출범 및 석·박사 채용 공고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야 통계분석과 연구를 전담할 '미니 연구소' 재정 연구본부를 구성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
- 연구본부는 통계분석팀, 재정운영지원팀, 재정협력팀 등 3개팀에 정원 20명이며, 2016년 8~9월 1차충원에 이어 2017년 2월 채용공고를 내고 석·박사 인력 2차충원을 진행중(www.kpfis.or.kr)
- 연구본부는 디브레인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품질의 재정통계를 생산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개도국에 재정정보화시스템(FMIS)을 컨설팅해주는 국제 협력 사업과 공무원 대상 재정교육과정 운영 등을 전담

● 재정연구원 같길과 할일 논의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재정정보원은 주요 사업 운영방향, 조직 발전방안, 신기술 및 신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해 학계, 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자문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dBrain 운영과 발전방안을 자문할 정보화자문위원회는 현행 디브레인 개선 방안,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방안, 통계 추출 방법 등의 자문을 맡게 되며,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본부 운영방향, 정기간행물 발간 계획, 연구 과제 발굴, 연구성과 평가방법 설계 등을 자문할 예정

● 중남미 재정정보화 위해 미주개발은행과 MOU 체결

-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과 재정제도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나누기 위해 2016년 11월 미주개발은행(IDB)과 MOU를 체결
- 양 기관은 중남미 국가들이 재정정보화시스템(FMIS)을 도입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도록 돕고, 중남미 재정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 재정정보화 연구, 국제 컨퍼런스, 재정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FMIS 도입 컨설팅을 위한 협조용자 기회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협력 세미나

-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은 2016년 12월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정정보원 설립배경, 주요 사업, dBrain 우수성 등을 설명
- 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dBrain 구축 및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디브레인 시스템의 수출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시스템구축 민간기업, 수출 유관기관 등과 체계적으로 협력할 예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및 예탁금 관리기관 지정

-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을 전산으로 통합관리하게 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2017년 1월2일 부분 개통
- 이 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했던 보조사업의 모든 과정을 통합화, 표준화, 전산화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징후를 업무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구비
- 시스템 개통으로 국고보조금이 '일괄교부 후 사후정산'에서 '예탁기관 예치 후 검증을 통한 정산' 방식으로 바뀔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을 국고보조금 예탁기관으로 지정

한국재정정보원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정정보 연구본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통계를 분석하고
재정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재정 교육 사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교육을 실시합니다.

dBrain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WB, IDB, ADB 등)와
재정정보화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재정혁신 및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재정경제 분야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종합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망 운영

국고보조사업 전 과정을 통합화, 표준화, 전자화하여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근절로 혈세 낭비를 방지합니다.

월간

나라 재정

창간호

월간 나라재정 2017년 1월호

통권 제1호 (발행번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908-8255

홈페이지 www.kpt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임형철(기획재정부 과장)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더쥬커뮤니케이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 지원

통합·체계적 재정
·정책통계분석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관리지원

- 재정통계분석 기법개발
- 재정통계분석 및 재정정보공개

- 각종 재정사업평가 및 관련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